

“원청교섭 제로, 7.15 파업 투쟁으로 돌파한다”

하청노동자 2.1만 명 요구에도 원청사 ‘묵묵부답’ ... 금속노조 “파업으로 교섭 열 것”

금속노조가 교섭 불응 원청을 규탄하며 파업 투쟁을 선포했다. 금속노조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의 즉각 교섭 개시와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원청 사용자의 실질적 지배를 받고 있는 금속노동자 중 2만 1천 2백 명, 77개 지회·분회가 원청교섭을 요구했다. 교섭 요구를 받은 24개 원청 대기업은 현재까지 테이블을 열지 않고 있다. 현재 원청 대기업의 교섭 거부로 인해 노조법 적용이 가로막힌 상태에서 정부 역시 원청교섭 촉진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하지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끝까지 원청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면 금속노

조는 파업 투쟁으로 답하겠다”며 “파업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교섭을 거부한 원청과 이를 방치한 정부에게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상만 위원장은 “금속노조는 올해 원청교섭과 초기업교섭에 사활을 걸었다”며 “더는 지체할 수 없다. 원청교섭 쟁취하고 다단계 하청 구조에 파열음을 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장의 구체적인 폭로와 규탄도 이어졌다.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는 지난 1월 노조법에 따라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필수 요건도 아닌 ‘업체명’과 ‘조합원 수’를 요구하며 교섭을 지연시켰고 6, 7월 두 차례의 교섭 참여 요구에도 끝내 불참했다.

황준규 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얕팍한 꼼수와 지연 전술로 정당한 원청교섭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크나큰 오산이다”며 “꺾데기뿐인 교섭 원칙으로 의제를 축소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꼬집었다.

2001년부터 원청교섭을 요구해왔다는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의 고발도 이어졌다.

최명식 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은 “법적으로 보장된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은 양재동의 결재라는 벽 앞에서 완전히 무력화되었다”며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이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행정법원과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현대제철을 실질적 사용자로 인정하고 ‘원청의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 바 있다”며 “원청은 법적 책임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강인석 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은 “창구단일화 절차와 원청교섭 시행령, 노동부 해석지침은 현장과 맞지 않는 문제투성이”라며 “정부는 원청의 교섭 불응과 지연을 엄정히 감독하고 하청노동자들이 교섭할 수 있는 실질적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화오션은 원청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면서도 구내식당 노동자인 웰리브지회를 제외해 반발을 샀다. 이에 웰리브지회는 지노위와 중노위를 거쳐 한화오션이 실질적 사용자임을 인정받았고, 지난 2일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으로 거통고지회와 웰리브지회는 ‘원청을 상대로 한 국내 첫 파업권’을 확보했다. 그러나 사측은 여전히 교섭을 회피

하며 시간 끌기로 일관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기자회견문에서 “애초에 법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리라 생각하지 않았다”며 “원청 사용자는 즉각 교섭을 개시하고, 정부는 가로막힌 원청교섭이 진전되도록 제 역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